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국회 동의없이 심사

檢, 체포안 부결 7주만에...금품 수수 의원 특정 등 자료 보강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이재명 대표 영장 '주목'

검찰이 1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과 민주당의 수 싸움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검찰 측에서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

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8월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 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상의 범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며 "이 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항변

했다. 이 의원 역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로 향하고 있다. 당장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회기인 점을 감안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29일부터 8월16일 이전과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는 8월16일 이후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자의 경우 이 대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후자의 경우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민주당 내에선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인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2월 유례·대장

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당내 무더기 이탈표 속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영장을 청구,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이 대표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부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여의도에선 전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이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는 오는 4일까지 나흘간의 휴가기간 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채움단 헌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폭염 노동자 휴식 보장법 처리하자"

민생채움단 출범...여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늘 출범한) 민생채움단은 분야별로 폭염과 폭우, 혹은 대우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후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비전'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며 "기후 위기

대응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쿠방 노동자들이 폭염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또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은 여름철의 중대 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코인 조사' 범위 놓고 이견

여야, 배우자 개인정보 제공 난색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그간 지부진했던 의원 전원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 모두 조사 범위를 두고는 권익위와 이견을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보냈다.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코인 거래소 계좌에 있던 돈을 받은 타 금융기관 계좌 정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계획이며, 민주당도 최종 양식이 확정되면 동의서 취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권익위에 공동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권익위에 동의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배우자 가상자산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정당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다른 공직자들이 하지 않음에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권익위가 누구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여야가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은경 민주 혁신위원장 잇단 설화

"미래 짧은 분" 발언 '노년층 비하' 논란...당내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잇단 설화에 휩싸이며 좌중우돌하는 모양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정작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거세다.

결정적 계기는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지난달 30일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과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아들) 생각이었더라"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부연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현대판 고려장", "어르신 폄하 DNA" 등으로 공세를 폈다.

혁신위가 하루 뒤 입장문을 내 "김 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 구태 프레임"이라고 방어하려 했지만, 노년층을 비하했다는 논란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다.

무엇보다 이 발언은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인사도 통화에서 "밖에서 볼 때는 쉬울지 몰라도 정치권의 언어가 그렇지 않다"며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한 달이 넘게 활동해 온 혁신위를 향한 평가도 썩 좋지 않다.

진명계는 당과 교감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 등을 '불쑥' 내놓은 데 불만이 감지된다.

비명계 역시 '공천률 혁신'을 언급한 혁신위가 결국은 진명계 지도부의 의중에 맞춰 공천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목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